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4. 1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4월 14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36호 『(주)루센트블록 및 (주)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6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37호 『(주)디렉셔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38호 『(주)코스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39호 『(주)페르소나에이아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0호 『(주)한국엔에프씨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1호 『비씨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2호 『(주)페이콕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3호 『비씨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안』, 제144호 『(주)더존비즈온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5호 『(주)핀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6호 『(주)케이에스넷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47호 『(주)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48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49호 『(주)아이콘루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150호 『(주)파운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151호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152호 『(주)코인플러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153호 『(주)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제일 마지막 안건인 (주)국민은행의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세부과제 중 6가지 미이행 과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었는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은 살펴보면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조정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음. 그 부분을 부가조건으로 첨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보고자) 혁신성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계획했던 18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10개는 완료된 상태이고 7개는 진행 중인 상황임. 진행중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 관련 데이터와 금융거래 관련 데이터를 융합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부분인데 5~6월 중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그것이 가능해지면 통신료 연체기록이라지 이용패턴, 로밍, 이런 다양한 정보를 금융거래정보와 융합해서 좀 더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진보가 있으리라고 생각됨. 나머지 5개 정도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연내에 대부분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 실무부서도 확인했지만 금감원에서 실지조사를 나가 체크해서 공유한 자료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음. 혁신성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음. 앞으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금융만 해서는 앞으로 답이 없는 것 아니냐, 은행의 위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금융도 향후에 플랫폼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셨음.

- (위원) 사실 통신과 금융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국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인정되는데 과연 금융 쪽의 새로운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듭. 그래서 기회는 주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아쉬운 부분이, 사실 노사가 합의해서 혁신을 하면 좋은데 노사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원래 100만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10만 건만 실적이 나왔다고 함.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계획보다 조금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모델 구축 이런 부분이 체계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움. 이번에 연장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기회를 준다는 측면, 잘 협의해서 과당경쟁을 안 하면서도 그것이 잘돼서 10만 건에서 20만 건, 30만 건이 되면 아까 생각했던 혁신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같이 하고 있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음.
- (위원) 오늘 안건을 보니까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는 안건보다도 과거에 승인했던 안건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음. 그리고 보니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2년 동안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 예를 들어 2년 전에 승인했던 혁신금융서비스 중에서 투자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가 아니면 금융서비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됐다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평가를 해서 3가지로 나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첫 번째는 효과가 크고 일반화 되어야 될 부분, 즉 규제특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혁신금융은 2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해서 중단해야 하는 그런 규제특례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판단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1년만

더 연장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반화될 것과 중단해야 될 것, 그리고 애매하니까 한 번 더 연장할 것, 3가지로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조금 어려운 과제지만 말씀 드림.

- (보고자)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도래되었음. 그래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시장에서 테스트 중에 있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효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국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사실상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가하지 않음. 따라서 잘 된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음.
- (위원) 아마 지난주가 2주년이었던 것 같음. 지난주에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금융위 사무처에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안 받아줘서 위원님들께 미치지 못한 것 같음. 보고자께서는 언론에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평가한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금융 관련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내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이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이 통과되었음. 기존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2년까지만 연장가능했는데, 그러면 4년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1년 6개월 다시 연장하고 그 사이에 규제완화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음. 잘 된 서비스는 계속하고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음.
-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인지?
- (보고자) 지금 법에 들어 가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음.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1년 6개월간 서비스 운영기간이 연장됨. 이것이 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규정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임. 구체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음.
- (위원) 금융혁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방향성이 거기에서 나올 것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됨. 그리고 너무 쉽게 승인해 주면 열심히 해서 혁신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심사를 하던 중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곳들을 실적이 없다고 승인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음.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19년에 기반 마련하고 2020년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림.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4호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의 CCP 업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에서 분리하여 ‘청산결제본부’를 신설함으로써, CCP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임

- (위원) 주요내용에 ‘청산결제본부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명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산결제 업무를 시행하는 시스템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지?
- (보고자) 현재의 한국거래소 정관에는 파생상품시장본부와 경영지원본부가 부산에 소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청산결제업무는 파생상품시장본부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그 업무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임. 해당 본부 소재지는

부산이고 시스템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음.

- (위원) 본부는 행정조직이므로 부산에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청산과 결제를 돌리는 시스템과 업무는 부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 아닌지?
- (보고자) 공간적으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당연히 다 가능함. 현재 시스템이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사항임.
- (위원) 어차피 본부(Headquarter)는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시스템도 부산에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사료됨.
- (위원) 혹시 서울에서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렇지 않는음.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으나 한국거래소 설립 이후부터 관련 업무들을 계속 부산에서 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본부 체계만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의 근무지를 옮길 필요성이 크게 없음.
- (위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14호 『증권사의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권사에 개인대주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종류별 ‘한도’ 및 ‘계산방식’을 마련하려는 내용

○ (위원) 공문은 언제 보내는지?

○ (보고자) 증권사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중에 빨리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6분 폐회)